

---

#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

2023. 1. 5.



교육부

# 순 서

I. 추진성과와 평가 .....	1
II.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2
III.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	4
[학생맞춤]	
1.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	4
[가정맞춤]	
2.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	6
[지역맞춤]	
3.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	8
[산업·사회맞춤]	
4.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	11
[추진체계]	
5. 교육개혁 입법 및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13

# I. 추진성과와 평가

## 1 주요 정책 성과

- ◆ (인재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19.),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22.)
- ◆ (국가교육책임제) 유보통합추진준비팀 발족('22.9.14.),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22.10.11.)
- ◆ (교육 행·재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22.12.24.), 교육부 조직개편('23.1.1.)

###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 마련

- 치열한 국제경쟁 하에 있는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부 주관 범부처 '인재양성 방안' 수립·발표
- 첨단분야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사업 신규 편성·증액  
※ (신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540억 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50억 원 등

### □ 국가교육책임 실현 기반 구축

- 유보통합 추진 전담부서를 발족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필요사항 분석
- 기본인권인 기초학력을 책임 있게 보장하기 위한 첫 종합방안 수립·발표

### □ 교육분야 행·재정 효율화

-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 간 균형 있는 재정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 국정과제, 교육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부 조직 전면 개편

## 2 개선 필요사항

### □ 교육개혁 청사진에 대한 대국민 설명 필요

- 우리 교육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정부의 개혁 방향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부족

### □ 교육주체와의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 필요

-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으로 개혁 추진에 공조·연대 필요

## II.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추진 여건

#### □ 대·내외 정책환경의 급변

- 현재 우리 교육은 급격한 기술진보, 코로나19,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내용)무엇을, (방식)어떻게, (대상)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

	What	How	Who
특징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 등	디지털 기술 발달, 팬데믹 경험 등	알파세대, 3050세대 등
요구	핵심역량 필요수준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변화 요구	온라인교육, AI 기술도입 등 교육방식 전환 요구	디지털기술을 통한 개별화 교육, 향상(up-skilling)교육 등 요구

#### □ 우리 교육을 향한 사회적 요청

- 우리 사회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기술경쟁 심화, 산업구조 변화
지표	기초학력 미달 비율(고2, 수학) '17. 9.9% → '21. 14.2% (교육부, 통계청, 2022)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05개(46.1%) (한국고용정보원, 2020)	교육의 사회요구부합(63개국) 초·중등 37위, 고등 46위 (IMD, 2022)
현장 목소리	“교육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돌봄 부담을 덜어줘야”	“학교(대학)가 지역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교육이 사회,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야”

### 2 업무추진 방향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

- (맞춤)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와 도전 요인에 대응하는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각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과감한 교육개혁’ 추진
- (자율) 학교·지역·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는 각 주체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

## 《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

<b>비전</b>	<b>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b>		
<b>목표</b>	<b>성장</b>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b>복지</b>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	
<b>국정과제</b>	<b>4대 개혁분야</b>	<b>10대 핵심정책</b>	<b>달라지는 모습</b>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b>1</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학생맞춤</div> <b>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b>	①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② 학교교육력 제고 ③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 깨어나는 교실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b>2</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가정맞춤</div> <b>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b>	④ 유보통합 추진 ⑤ 늘봄학교 추진	→ 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b>3</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지역맞춤</div> <b>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b>	⑥ 과감한 규제혁신· 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⑦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구축 ⑧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지역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b>4</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산업·사회맞춤</div> <b>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b>	⑨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b>5</b> <b>추진체계</b>	<b>교육개혁 입법</b>	⑩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b>수평적 협력 파트너십</b>	▶ 전략적 사회관계 장관회의 운영 ▶ 국민 소통 활성화	

### Ⅲ. 핵심 추진과제

#### ① [학생맞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b>방향</b>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실을 깨어나게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역량 함양을 보장	
<b>목표</b>	2023년에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수립 고교교육력 제고방안 마련	→ 2026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확산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 확산

#### 1 [교육개혁 ①]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 개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수립('23.1월)
  - 기존 서책형교과서를 바탕으로 AI 기반 코스웨어\*(디지털 교과서)를 운영하여 학습데이터 분석결과를 교사가 수업에 활용해 학생별 최적화된 학습지원('25~)
  - \* 교과과정(Course) + 소프트웨어(Software) 합성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 ※ 개선방안 수립('23) → 시범운영('24) → 단계적 도입('25)
- 교육현장에서 도출된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AI, VR·AR 등)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테스트베드 확대\*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23.상)
  - \* 에듀테크 소프트랩 : ('22) 경기, 광주, 대구 3개소 → ('23~) 6개소 신규 구축(교육청 자체)

#### 2 [교육개혁 ②] 학교교육력 제고

- 프로젝트·토론형 수업,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수업 방식의 혁신과 이와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교실수업 혁신방안' 마련(~'23.상)
  - ※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이와 연계된 평가 실시, IB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업 혁신 사례 확산
  - 모든 교사가 수업·평가 방식의 혁신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집중 연수 실시('23.하~)
  - 교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수립(~'23.2월)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방 우수학교 육성, 고교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교육력 제고방안(시안)' 마련(~'23.상)

-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의 국립고 역할 강화, 학교-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
- ※ 미국 Charter School, 영국 Academy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학교 운영방식 혁신 추진

### 3 교육개혁 ③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 (양성)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 및 교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23.4월)
- ※ 교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23.1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반영한 방안 수립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향(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여학위 및 자격) 전문석사학위(M.Ed) 또는 전문박사학위(Ed.D) / 정교사 1급</li> <li>❖ (운영) 양성규모 적정화·양성교육 전문화 목표만 제시하고, 운영 자율성 보장</li> </ul>			
추진방식 자율 선택	대학 내 자체조정	사대+교직과정+교대원, 교대+교대원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
	기관 간 통합	교대+교대, 교대+사대 사대+사대	

- (연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수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에듀테크 기업 등과 협업하여 생애주기별 체계적 맞춤형 교원 역량 함양 추진('23.상)
- (여건) 교사가 혁신의 주체로서 수업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 마련 추진('23.8월)
- 교육혁신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모델 마련 및 '중장기('24~'27) 교원수급계획' 수립('23.3월)

### 4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

-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회(자유학기제, 방과후 등 활용) 및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 ※ 방과후(방학 중), 자유학기제 연계 SWAI 캠프 '디지털새싹' : ('22) 10만 명 → ('23) 20만 명
- ※ 디지털튜터(디지털 교육소외지역 초교 중심) : ('22) 34교 → ('23) 340교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 개별 학습 지원, 다중지원팀 운영 내실화 등 안전망 강화
- ※ 202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23.6월)

## ② [가정맞춤]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b>방향</b>	모든 아이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 해소로 출발선 공정 보장	
<b>목표</b>	2023년에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4개 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 2026년까지 유보통합 단계적 완성 늘봄학교 전국 확대

### 1 [교육개혁 ④] 유보통합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부금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 제고

※ 관계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23.1월)

로드맵	1단계('23~'24) : 격차해소, 기반마련	→	2단계('25~) : 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조직	교육 중심의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지원
재정	재원(유특회계·국고·지방비) 통합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24)		제·개정 법률 시행

-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관리 체계 통합방안'('23.상)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23.하)

※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을 담은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수립('23.2월)

### 2 [교육개혁 ⑤] 늘봄학교 추진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23.3월~)
  - 대도시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 확산('23. 5개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틈새·일시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 초1 입학초(3월) 조기학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집중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 AI·SW, 예체능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 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및 교원 업무경감

\* 기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중앙 1개, 시도 165개)를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로 개편

- 시범교육청 선정('23. 4개 내외), 인력재정 집중 지원 → '25년부터 전국 확대



초등학교 교육 및 돌봄 체계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 돌봄]	[교과·창체 수업]	오후 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3~4학년	○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방과후1	틈새돌봄
5~6학년			방과후2	방과후2
				[저녁 돌봄] ○ 희망 학생 대상 ○ 석·간식 제공 ○ 저녁 프로그램 제공

### 3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기회 확대

- 교육급여를 현실화해 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지속 지원하여 고등교육 기회보장
  - (초·중등)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고, 교육활동에 소비하도록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 지급으로 개편('23.3월)
    - ※ 교육급여('22 → '23, 만원) : (초) 33.1 → 41.5 (중) 46.6 → 58.9 (고) 55.4 → 65.4
  - (고등) 국가장학금과 시중 대비 저금리(1.7%)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대상을 **취업후상환** 특수·전문대학원생,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확대 **청년정책**
    - ※ 국가장학금 : ('22) 4조 6,567억 원 → ('23) 4조 5,664억 원(△903억 원, 학생 수 감소분)
    - ※ 학자금 대출 : ('22) 1,400억 원 → ('23) 2,284억 원(+884억 원)
- 저소득층·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약 1.5배 확대('22. 3.9만 명 → '23. 6만 명)
  -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2. 32개 → '23. 53개)
- 복지, 학업, 정서, 다문화특수교육 및 안전(학교폭력, 성폭력, 학대 등)에 있어 사전예방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전주기 통합 서비스\*로 재구조화('23.3월~)
  - \* 예) 학생맞춤통합지원 :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사례관리(접수신청→진단→지원→성장관리) 체계

### 4 안전한 학교 구현 지원

-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추진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를 예측·분석하고 판단·해결하는 위기대응능력 증진
  - ※ 시·도 1개소 이상 안전체험관 확충('23~'26, 6개소 신규 구축), 전문인력 지원 등
-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취약요소 선제적 발굴·개선
  - \* ('22) 2,000개교 → ('23) 3,000개교 → ('24) 5,000개교 → ('25) 6,199개교

### 3 [지역맞춤]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b>방향</b>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지역혁신 성장의 허브로 육성	
<b>목표</b>	2023년에는 5개 지자체 RISE 시범운영 정원·학사·재정 규제 제거	2026년까지 지역의 대학 지원 권한 대폭 확대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

#### 1 교육개혁 ⑥ 과감한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규제개혁

##### 《 고등교육 분야 》

- (규제혁신) 대학 정원·학사·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
  - 총정원 내 학과 신설·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신규 캠퍼스 설치 및 대학 통합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대학규제 제로화 추진
    -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완료('23.상)
  -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23. 대학 8,057억 원, 전문대학 5,620억 원) 집행 시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
    - ※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23)
- (권한이양)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 등 권한,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 개정(연내)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등 9개 지정·운영 중

이양 권한	개정 필요 법률
경자구역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폐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구조개혁) 정부의 획일적 평가는 폐지, 대교협의 인증평가 및 사학진흥 재단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경영위기대학	→	경영부실대학	→	한계대학
대학 간 통·폐합, 학내 구조조정 등 경영자문 제공·이행 관리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 시 특례를 통해 회생 기회를 부여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사회복지법인 전환 등 퇴로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25억 원) 신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추진		

- 캠퍼스 내 설치 가능 편의시설 확대 등 대학이 유희 재산 수익성을 높여 등록금 외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23.하)

## 《 유·초·중등교육 분야 》

-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정형적 모델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 마련('23.상) → 법령정비('23) → 시범운영('24)

### 교육자유특구 방향

- ❖ 특구 내 대안학교의 설립 절차 개선,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 ❖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 등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자유특구 기획

- 지역 여건별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으로 교육청 자율권을 확대해 학급 과밀 해소 지원('23.1월)  
 \* 소규모학교(초 36, 중·고 24학급 미만), 학교 이전 신설 등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 2 교육개혁 ⑦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규제개혁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추진
  - '23년에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 추진(5개 지역 내외)하고, '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 지자체와 중앙부처(교육부+α)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지원
- 지자체에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지역의 대학지원 역량 강화 지원  
 ※ RISE연계 대학정책 등 교육개혁 현장 지원을 위한 시·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 3 **교육개혁 ⑧**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마련('23.2월)
  - \* **예** 학교에 문화체육복지 등(예: 돌봄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주중 일과시간은 학생 중심 이용, 주중 일과 외 시간 및 주말은 주민과 공동 활용
-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모색

####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향

- ❖ (재원)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교육청에 재정지원 추가
- ❖ (규제개선) 교육부·행안부 투자심사 간소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사항 발굴
- ❖ (추진체계) 교육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 협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4 지역 중심 재정지원 확대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23.1월)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 \* 총 규모 : 9.7조 원(대학 자율 혁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균형적 학문 발전 등)
- 지역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37개교) 육성 지원규모 확대
  - ※ ('22) 1,500억 원 → ('23) 4,580억 원 (대학혁신사업 1,772억 이관, 1,308억 증액)
-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을 혁신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신설
  - ※ ('23) 일반대학 66교 1,900억 원, 전문대학 69교 600억 원 등 총 2,500억 원
-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창업교육 혁신 공유대학 대상 권역('22. 2개 → '23. 5개) 및 규모 확대 **청년정책**
  - ※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 ('22) 5.6억 원 → ('23) 52억 원(+46.4억 원)

#### 4 [산업·사회맞춤]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b>방향</b>	교육·기술·산업·고용 분야의 범부처 전문성 결집으로 첨단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국제 난제 해결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	
<b>목표</b>	2023년에는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수립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데이터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

\* 반도체(첨단소재),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 1 **교육개혁 ⑨**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기술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 추진(~'23), 인재양성 전략회의('23.2월, 1차 회의)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 확립

##### 인재양성 전략회의 개요

- ❖ (구성) 대통령(의장), 정부위원 및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 구성
- ❖ (목적 및 기능)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 심의·조정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3.2월)을 기초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적 발표
- 미래 인류적 난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균형있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 투자 확대
  - ※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 : ('22) 1,883억 원 → ('23) 2,414억 원(+531억 원)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22) 5,190억 원 → ('23) 5,290억 원(+100억 원)

#### 2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 지원('23. 8교)
-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설('23. 10교) **청년정책**
  - ※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과정(640시간)으로 '23년 반도체 교육과정 시범운영
-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할 수 있는 권역별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지정('23. 4개)하여, 전문 인재양성의 중심으로서 집중 지원
  - ※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 ('23) 설계비 27억 원 (총사업비 : 657억 원, 총 3년)

-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확대('22. 8개 → '23. 13개)
-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23. 8개 부처, 16개 분야) **청년정책**
  - ※ 대학혁신지원 표유형(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 ('22) 420억 원 → ('23) 1,052억 원(+632억 원)
    - ①산업부 :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    ②중기부 : 소프트웨어(SW)콘텐츠
    - ③과기부 : AI 반도체                            ④복지부 : 의료 AI                            ⑤국토부 : 공간정보 등
    - ⑥특허청 : 지식 재산                            ⑦개인정보위 : 정보보안                    ⑧환경부 : 디지털 물산업

### 3 고숙련 실무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직업계고의 신산업·신기술 분야(반도체, 디지털 등)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2.0 추진('23.상)으로 고숙련 실무인재 집중 양성
  - \*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한 첨단산업, 미래 유망 성장산업 중심으로 확대
  - ※ 직업계고 위상 재정립 및 향후 비전을 포함한 '(가칭)직업계고 발전방안' 수립('23.상)
- 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여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 지원('23. 1,350명)
  -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 ('22) 28억 원 → ('23) 43억 원(+15억 원)
-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컨소시엄 시범운영('23. 5개)
- 지역의 전략 및 선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및 신산업 분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 확대
  - ※ 신산업 선도 : ('22) 12교 → ('23) 14교, 마이스터대 : ('22) 8교 → ('23) 14교(누적)

### 4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입 및 국내 정착형 인력 육성

- 지자체-산업계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sup>가칭</sup>)Study Korea 3.0)을 수립('23.6월)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육과정 교류 확대

#### Study Korea 3.0 주요 방향

- ❖ (유치·교육) 유학수요 및 출신국가 다변화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정부초청장학생(GKS) 확대 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 (취업·정주)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등과 협력하여 비자제도 개선 및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착 지원
- ❖ (기반 강화) 근거 법령 마련, 국립국제교육원 등 전문기관 기능 내실화



## 5 [추진체계] 교육개혁 입법 및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1 교육개혁 ⑩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규제개혁

- 국가·지역성장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를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법제화 추진
  - ①러닝메이트법)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을 위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 ②교육자유특구법)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 ③고등교육법·④사립학교법)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도 기반 구축

### 2 교육·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 전략적 운영

- 정책의 현장 안착과 다양한 자원·역량을 상호 활용해 교육·사회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부처, 민간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핵심 사회 의제\* 대응 및 정책 연계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의 협력적 완수를 뒷받침
  - \* 미래, 통합, 안전 등 주요 가치를 포함한 「2023년 사회정책 방향」 수립 (23.1월 예정)
- “현장방문형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주요 계기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사회의제 대응방안 마련 및 현장 점검 병행
  - \* 신학기 대비 학교 앞 안전 점검, 여름철 대비 식품안전 강화 등 계절·시기별 이슈 담당부처에서 안전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정책연계·현장방문 등 조율·홍보 총괄

### 3 교육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소통·홍보 활성화

-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개혁 주요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책 성숙 과정을 거쳐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 완수 노력
- ‘교육개혁자문위원회’(23.1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 과제들 간의 정합성·일관성 확보
- 개혁과제 주요 계기별 현장소통 목적에 따라 토크콘서트, 타운홀 미팅 방식 등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의 현장 행보 시리즈 추진(연중)